

경대수 국회의원(자유한국당, 충북 증평·진천·음성군)

## 정부정책 유연성 이끌어내 정부-농가 사이 '소통창구'

오리농가시설현대화방역시설 보완 확대  
급식 등 다양한 분야 관련제품 적극 개발  
소비촉진-위상제고위해 '큰 역할' 기대

충북지역은 호남지역 다음으로 오리 산업이 발전한 지역 중 한 곳이다. 특히 주원산오리를 비롯한 오리계열업체를 중심으로 오리고기 유통업도 활발한 곳이다. 그러나 최근 오리농가 사육제한 실시로 충북지역 오리농가가 50% 이상 줄어들면서 오리생산 기반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충북 지역의 오리산업 재 부흥을 위해 정책을 마련하고 오리산업 활성화를 위해 정책의 소통창구가 되겠다는 경대수 의원을 직접 만나봤다.



Q  
오리농가들에게 새해인사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새로운 희망을 가득 품은 '황금 돼지'의 해, 2019년 활기찬 기해년(己亥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오리농가 여러분 모두 뜻하시는 소망을 이루시고 가정에 풍요와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빕니다. 또한 오리산업의 앞날에도 무한한 발전과 번영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Q  
증평·진천·음성군은 오리산업  
주산지 중 하나입니다. 사육제한으로  
충북지역 오리 농가들도 어려움이  
많았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통계청 가축동향조사에 따르면 겨울철 오리농가 사육제한을 시행하기 이전인 2016년 초 충북도는 상시 오리사육농가수가 113호로 전국 오리농가의 약 16%를 차지할 정도로 오리산업이 주된 축산업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기준 오리농가는 47호로 66호가 감소했습니다. 사육제한으로 생산량과 매출액이 급감하고 피해를 입는 농가와 계열업체 등 오리산업의 피해에 대한 보상대책이 미흡하거나 전무한 상황에서 관련 종사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며, 전국에서 사육제한 시행농가가 가장 많았던 충북지역의 경우 그 피해가 더욱 큰 상황이라고 합니다.

Q  
충북도에서는 오리산업에 대한 대책들이  
타 지자체에 비해 선행되는  
편이라고 하는데요, 어떻습니까?

오리협회 등 관련 단체들은 겨울철마다 반복되는 사육제한에 따른 피해와 과도한 AI 방역조치의 개선을 요구하고자 지난해 9월 27일 대규모 총결기대회를 개최하고 11일간 단식농성을 벌여 농가의 보상단가는 일정수준으로 개선되도록 하였으나 종오리 농장의 종란폐기 피해의 100% 보상안 등을 추가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나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행히 충북도의 경우 사육제한과 관련한 자체 예산을 수립하여 종란 폐기를 100% 보상하는 한편 사육제한 농가 외에 겨울철에 오리를 사육하는 농가들에게 마리당 300원의 유류비를 지원함으로써 AI 예방과 보상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김만섭 한국오리협회장과 김성수 전북도지회장, 정달현 이사의 목숨을 건 단식 투쟁 농성장에 방문한 경대수 국회의원. AI 방역조치에 따른 오리농가 피해대책 수립촉구를 위한 단식농성은 9월말부터 10일 이상 이어졌다. 당시 경대수 의원은 오리농가들의 요구사항 관철을 위해 노력하며, 오리농가들의 호응을 받았다.



Q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북에서는  
농가수가 50% 이상 줄어들고 있습니다.  
위축된 오리산업을 위한 해안이 있을까요?

전남·북지역 다음으로 오리의 주산지였던 충북의 오리산업이 최근 하향산업으로 돌아선 것 같아 지역구 의원으로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오리산업이 본격적으로 기반을 확충해가면서 그 위상이 꾸준히 향상되어 가고 있으나, 오리가 가진 무한한 가능성에 비해 아직 성장 속도가 기대에 많이 미치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2010년 이후 AI에 따른 수급불균형과 가격 등락 등의 여파로 소비불황이 지속되고 있고, 최근에는 오리농가 사육제한(휴지기제)으로 인해 오리산업이 크게 위축된 상황입니다.

지금 당면한 과제는 AI에 대비한 정부의 과도한 방역조치를 오리산업의 발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조율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대부분 가설건축물 형태로 열악한 사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농가의 시설현대화와 방역시설 보완을 서둘러 확대해 나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급식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오리 관련 제품을 적극 개발하고, 방송매체와 SNS 등을 통해 오리고기의 우수성과 레시피를 홍보하는 노력도 오리산업의 소비촉진과 위상 제고에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AI방역도 중요하지만 오리산업의 위기를 인식하고 과도한 규제는 철폐하면서 오리농가의 목소리를 더욱 경청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정부와 오리농가 사이에서 소통창구가 되어 정부정책의 유연성을 이끌어내고 위축된 오리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습니다.

Q

오리산업에서 가장 문제는 AI입니다.  
휴지기제 등을 통해 차원 높은 AI방역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생각은?

오리농가 휴지기제는 AI 예방의 한 방편으로 시행해야 하는 제도로서 그 효과도 이미 검증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2016년 11월부터 2017년 3월까지 발생한 AI는 343건인 반면 2017년 10월 휴지기제 시행 이후 발생건수는 22건에 그쳐(올 겨울 발생건수 없음) 휴지기제 도입전의 6.4%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오리업계가 큰 어려움에 빠져 있다는 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휴지기제로 오리생산이 급감하면서 오리는 금값이 되었지만, 그동안 휴지기제에 참여한 농가는 생계에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무엇보다 오리고기값의 폭등은 음식점들이 폐업하거나 메뉴를 바꾸면서 소비시장을 크게 위축시키는 치명적인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지난해 10월 정부는 사육제한 기한을 4개월로 단축하고 보상규모를 상향하는 등 보완대책을 내렸지만 아직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AI의 철저한 방역과 함께 오리산업과 오리농가 전체를 아우르는 실효성 있는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Q

사육제한, 즉 휴지기제는 산업으로서는 발전적이지 못한 방역정책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의원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AI 예방을 위해서 오리 뿐만 아니라 가금류를 사육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AI는 적게 발생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해당 산업의 피해는 고려하지 않고 겨울철 사육제한을 AI 예방대책으로 밀어 붙이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판단됩니다. 방역 이전에 산업의 진흥이 전제되어야만 합니다.

특히 겨울철 사육제한은 임시방편적 대책일 뿐 지금이라도 정부는 AI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세워나가야만 합니다. 오리농가들이 시설이 열악해 SI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전파의 매개체라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오리농가들의 사육시설과 방역시설을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특별지원 사업을 중장기적으로 시행해 나가야 합니다. 70% 가까이 되는 가설건축물형 축사를 정식건축물로 개편하고 방역시설을 완고히 다져나가야 합니다.

오리협회에 따르면 자조금사업으로 오리농가 사육시설 개편을 위한 연구용역 사업을 진행중에 있으며, 이 결과를 토대로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정부에서는 본 지원사업을 위해 반드시 2020년부터 예산을 수립해 줄 것을 촉구하며, 저와 농해수위 의원들도 뜻을 모아 오리농가들의 사육시설이 개선돼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지난해 9월 14일 경대수 의원 주최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오리농가 휴지기제, 대책이 필요하다' 전문가 좌담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 참석한 오리업계 전문가들은 오리사육 휴지기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휴지기제 기금을 단속시키는 결과를 이끌어냈다.



오리산업 발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도한 방역조치  
합리적 조율해 나가야

Q

지역 오리농가들에게 힘이 되는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오리산업은 타 축종에 비해 역사는 짧지만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경이로운 성장을 일궈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오리농가들의 피땀 어린 노력과 희생이 뒷받침되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비록 잠시 주춤하는 상황이지만 오리농가들이 힘을 모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나간다면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롭게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저 역시 국회차원에서 오리산업의 발전과 농가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앞장서 노력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